

한미 FTA와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

성한경*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hksung@kookmin.ac.kr



1. 한미 FTA 발효의 의의

한미 FTA의 비준이 눈앞에 가다오고 있다.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적인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이 선언되었다. 이후 한미 FTA 협정문은 미국 행정부가 Trade Act of 2002에 의거해서 미국 의회로부터 부여받았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유효한 마지막 날인 그해 6월 30일 양국 통상장관에 의해서 정식 서명이 되면서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만을 남겨두는 듯 했었다. 그러나, 2008년 11월 버락 오바마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선

1)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 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06.8~2011.8)
- "Veto Power in Committees: An Experimental Study"
-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 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2009)

출되고 지속적으로 양국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협정문 중 미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 12월 4일 추가협상이 완료되면서 한미 FTA는 드디어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위한 절차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미 FTA는 협상 전후 그리고 비준동의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로 인해 한국경제가 미국에 종속되는 것 아닐까하는 우려,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을 중심으로 일부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의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관세인하로 인한 파급 효과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를 통해서 한국은 산업 경쟁 촉진, 신기술 및 경영도입의 확산,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TFP)의 향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 선택폭의 확대하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한미 FTA와 서비스업

FTA를 비롯한 통상협상은 당사국간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1947년 GATT가 만들어진 이래로 통상협상의 화두는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자유화였다. 그러나 1970~8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반복되면서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서 더 이상 관세인하만으로는 무역자유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각국은 동경라운드에서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한 관심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1995년에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근거 협정으로 상품교역을 규정한 GATT 외에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GATS와 지식재산권을 규정한 TRIPS가 자리잡게 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미 FTA로 인한 혜택도 지나치게 관세철폐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는 한미 FTA 최종 타결안에 대해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한미 FTA가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의 반대로 타결이 지연되었던 사실에서 미국과 EU와 같은 선진국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경쟁력이 높다. 그리고 발표된 연구결과들에서도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추가협상으로 인해 예상되었던 자동차 수출액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15년간 연평균 5억 달러에 가까운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제

조업 전체 국내생산의 증가가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약 5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질을 높여서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개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준비해 놓았고, 한미 FTA에 따른 제도개혁을 통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3. 서비스업과 서울

서울에서 서비스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6.7%로 전국광역자치단체중 제2주도 다음으로 높고, 생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서비스업에서 소규모 영세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에 있다. 비록 서울은 전국여타 어느 도시에 비해 사업서비스 및 금융 및 보험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아직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이 전국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를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추가적인 개방 폭은 제한적이다. 양국은 보험중개업에서 비대면 방식의 제한적 조건하에서 mode 1 형태의 서비스 교역을 허용하고, 계리·손해사정·위험평가·컨설팅 등과 같은 보험부수 서비스업에서 현재 개방 수준을 준수하되 자격제한 및 등록요건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금융정보를 해외위탁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 감독을 전제로 2년 유예 후 허용하기로 하였고, 투자펀드의 원화자산운용 해외위탁은 허용하지 않고 2년 후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외 우체국 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추가적인 개방이 아닌 현재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서 일부 법규제의 정비에 크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업에서 한미 FTA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한미 FTA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선진화되고 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21일 서울은 부산과 더불어 금융중심지로서 선정되면서 금융서비스업을 발

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 부산에 비해 서울이 금융중심지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려 보면 서울이 금융중심지로서 자리잡는 것은 쉽지 않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가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산업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큰 경제권이 뒷받침하고 있는 점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감안한다면 G-2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위상으로 인해 서울이 상하이를 앞지르는 것이 힘들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높은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 수준과 잘 정비된 금융서비스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자본들이 안심하고 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상하이는 중국이라는 거대경제권을 업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금융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을 계기로 은행업의 명시적 규제를 대폭 철폐하였고, 보험시장이나 주식시장의 개방도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합자형태의 투자나 특정 기업들에 대한 주식매입만 가능한 등 여전히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OECD 가입과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개방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져 와서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개방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금융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게 되고,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한미 FTA와 서울의 정책과제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서비스업 특히 금융서비스업이 발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고, 전국 어떤 도시보다도 서울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그렇기에 서울은 한미 FTA를 금융서비스산업 발전의 전기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정책 집행이 과연 한미 FTA와 배치되지 않는지 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금융서비스에 국한한 제도적 정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전반에 대한 제도적 손질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규제의 개혁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특히, 기존에 검토되었던 금융중심지로 서울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더하여 한미 FTA를 통해서 이루어진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외에도 단순히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국진출이 자유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은 외국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대외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국내금융회사들의 본사가 자리잡고 있는 서울의 인지도를 높여 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규제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시 해당 금융회사 모국(home country)의 규제감독 수준을 명시적·비명시적으로 고려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미 FTA로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보험 워킹그룹을 통한 정부간 협의채널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국내금융회사의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자체는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를 기회로 활용할 경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개방에 따른 거센 도전에 우리를 노출시킬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회사들이 한국에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미국의 대한민국 투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경제적 안정성 외에도 외교안보적인 불안요인들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결국 한국 시장의 안정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이 한국의 수도 서울이 명실상부한 금융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SDI**